

투데이 칼럼

올바른 지역신문의 역할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방자치 30년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 한정된 여건에서도 고창군의회는 8대에 걸쳐 예산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및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왔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이 관하여 따른 책임감을 갖고 군민과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치는 지방의회의 제2의 도약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군민과의 소통이다. 고창군의회는 군민을 대신해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뜻과 요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항상 군민 가까이에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

이즈음 필자는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지방신문의 구독자로 군민의 한 일원으로 느낀 점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우리 지역에도 지역신문이 존재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공유를 하며 주민역량을 한층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주역할은 공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이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때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내 정보교류나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전한 비평과 대안 제시를 통해 건강한 군민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가치관 확립

우리는 보통 몇몇 중앙일간지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으로 구분하곤 한다. 때때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일부 언론사는 정치성향에 따라 편향된 기사 게재를 넘어 악의적 보도를 하고, 이는 국민 분열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중앙일간지의 일례를 보듯 지역신문이 작은 지역사회에서 군민 여론을 가르는 방향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는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선택할 순간이 발생하지만, 때로는 "흑과 백" 이외의 제3을 선택할 때가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언론이 특정 권력, 또는 특정인에 밀착하여 무분별한 비판이나 비난을 일삼거나,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 상대를 길들여 가는 행동으로 눈

살을 찌푸리게 하는 편파적 보도는 다수 독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지역에서 환영받는 신문이 되려면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임을 피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성을 가진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때에 비소로 정권직필의 언론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언론의 품격 없는 언어, 표준이 될까 무섭다

언론 보도는 어느 누가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특정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정보의 좋은 기사가 될 수 없다.

언론은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선택을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한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은어, 약어, 비속어 등은 상황 전달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피해야 한다.

기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

는 독자들에게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독자 중 일부만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생산하는 것은 기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 지역민 눈과 귀의 역할... 지역민과 밀접한 뉴스 발굴 제공해야

지역사회는 중앙언론의 특성상 중앙언론의 지면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의 대부분은 지리적 및 행정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지역주민에 의해서 발행되는 주간 신문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만들어갈 수 있어 지역신문들이 지역일간지에 비해 훨씬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고, 주민 생활에 밀접한 뉴스를 발굴하거나 제공해 줄 수 있다.

지역신문은 "그 지역의 여론의 중심축이고 지역민의 눈과 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신문은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매스미디어라 할 수 있다.

▲ 지역신문의 생명력은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

주민이 외면하는 지역신문은 생명력이 길지 않다.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사랑받고 살아남으려면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고,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며, 주민을 대변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가려온 곳을 정확히 읽어줄 때 역할과 사명감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믿는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마을 거주지 덮친 터키 산불



3일(현지시간) 터키 무을라주 보드룸 인근 오렌 마을에서 불길기 치솟고 있다. 터키 남부를 뒤덮은 대규모 산불이 7일째 기승을 부리면서 8명이 숨지고 약 1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산불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탈리 시소프 사진들고 모인 시위대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 주재 벨라루스 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벨라루스 운동가 비탈리 시소프의 사진을 들고 있다. 키예프에 본부를 둔 '벨라루시안 하우스'를 이끌어온 시소프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공원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소프가 자살을 위장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 및 수기 공모전이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주관한다.

공모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소개 등 영상 분야와 어르신들의 가치 있는 노력을 표현한 사진과 함께 사례 등을 자유롭게 글로 작성하는 사진·수기 분야다.

일자리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전자우편(05bsilver@hanmail.net)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영상부문으로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그리고 사진·수기 부문으로 선정작 3개, 총 5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대상은 은누리상품권 30만 원, 최우수상 20만 원, 선정작은 각 10만 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공직사항) 및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전화 063-255-91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노인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국민참여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각수록 '노인일자리'에 대한 공감과 재미,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가 중요하다. 공모 작품은 애니메이션, 패러디, 모션그래픽, 셀프영상 등 장르의 제한이 없다. 60초 이상 90초 이하의 분량이면 가능하다.

공모전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이 소개되어야 한다.

특히 공모전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국민의 시각에서 표현한 참신하고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들이 발굴·확산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노인일자리가 가진 긍정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는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노동계는 여전히 부족한 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현장 안전 관리 담당 등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과천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1월, 크레인에서 자재가 떨어져 노동자 한 명이 숨졌다.

한 달 뒤엔 400 미터 떨어진 공사장에서 H빔이 노동자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그러나 현장소장들만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사망 사고를 전수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341개 사업장에서 342명이 숨졌다. 하루에 두 명이 일하다 숨진 셈이다. 재판에 넘겨진 96곳 사업장 중

44곳에서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았다.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이 사법처리 대상이 된 사업장이 38곳이었다.

김포 어느 공사 현장에서 지난 5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가정해보면, 이곳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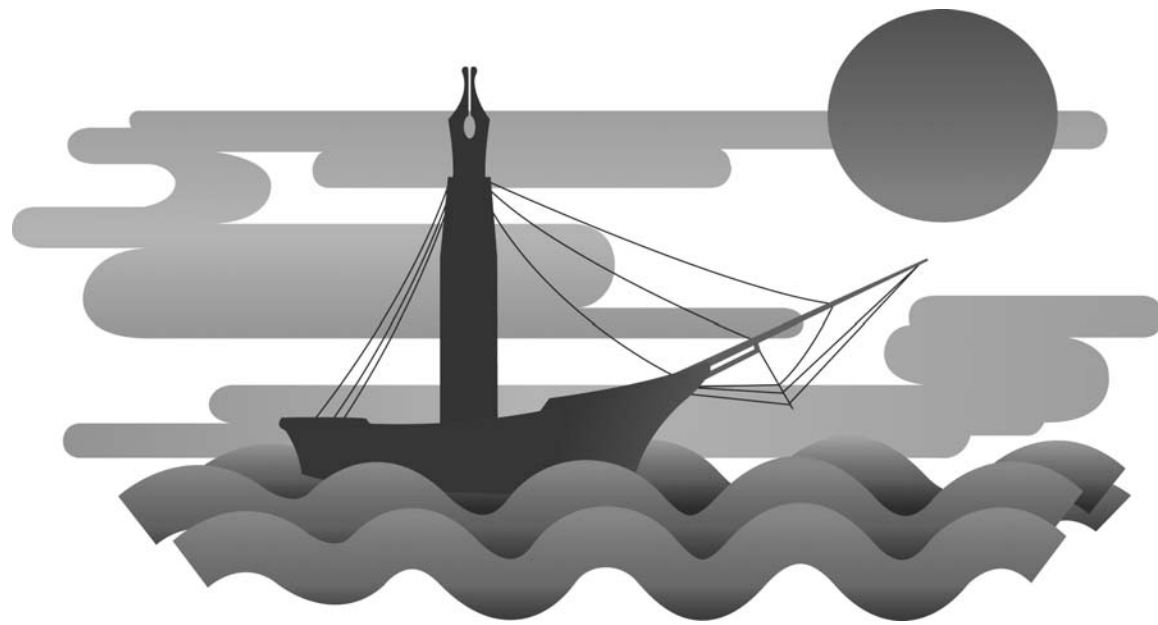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공사 금액이 50억 원 넘는 곳이어야 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33억 원이다. 상반기 사망 사고가 난 341개 사업장 가운데 182개가 건설업종이다.

법 적용 기준인 50억 원을 넘는 곳은 63곳, 3분의 1이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의 법 적용 기준은 근로자 수 50명 이상이다.

올 상반기 사망 사고가 났던 159개 사업장 가운데, 50인 이상 규모인 곳은 3분의 1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곳이 4분의 1이다. 사업장 셋 중 둘은 처벌을 피한다는 결론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